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내각제'였다. 오랜 기간 내각제를 주장한 김종필과 손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긴 했지만, 김대중은 그 공약을 지킬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내각제는 금기의 단어가 됐다. 공약대로라면 99년에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렇다 할 해명의 말도 없이 그 시기를 넘겨 버렸다. 내각제 개헌이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믿는 이가 없어서였는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은 의외로 적었다.

그보다 10년 먼저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대선 당시 "2년이 지나고 난 뒤 중간평

차라리 네거티브가 더 낫겠다

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역시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러니까 노태우의 공약도 지킬 마음이 없는, 당장 대통령이 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그 시절엔 이게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선거 때면 으레 공약이란 이름으로 온갖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엔 다 없던 게 돼 버리곤 했으니 말이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언론 이외에도 시민단체나 개인에 의한 정부 감시가 가능해졌다. 별다른 이유 없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왜 공약을 안 지키느냐?"며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기에, 많은 이들이 여기에 공감했다.

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보자. 그가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건 등록금이 비싸다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분출되었기 때문이지, 이명박이 특별히 대학생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명박은 대통령이 된 뒤 4대강 사업처럼 국민들이 안 지켜도 된다고 했던 공약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등록금 인하에 대해선 무관심

했다. 결국 대학생들은 왜 공약을 안 지키느냐며 거리로 나섰다. 이제 더 이상 공약을 내건 뒤 어쩔쩔 넘어가는 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장난을 시작한다. "김해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했지만, 기존 공항을 새것처럼 멋있게 리모델링하기로 했으니 그게 신공항이나 마찬가지다. 난 공약을 지켰다." "근로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됐지만, 이게 증세는 아니다. 따라서 나는 공약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장난 역시 박대통령의 몰라에 일조했다.

19대 대선을 앞둔 현재, 대선 후보들은 여전히 장밋빛 공약을 내세운다. 예컨대 A후보는 공공 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4대강사업 수준인 21조 원이 필요하다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그런데 A후보는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 증세 없는 복지에 발목이 잡혔던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모양이다. 심지어 군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니, 갈수록 입대 인원이 적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쩌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

B후보는 '청년고용보장계획'을 시행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차원으로 2년 동안 월 5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6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18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서 드는 돈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일 텐데, B후보 역시 증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C후보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하니 한숨이 나온다. 증세를 하겠다고 약속한 D와 E후보는 아쉽게도 당선가능성이 없고, 완주할지 여부도 판단이 안 서는 상태다.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2001년 122조 원에서 2016년 627조 원으로 5.1배 증가했다. A나 B 중 하나가 당선되고, 이들이 증세 없이 공약을 달성하겠다고 하면 5년 후 국가 채무는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무섭다. 이게 다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정적 대결을 하라는 사회분위기 탓인가? 그러나 이렇게 외쳐 본다. "정책 대결 대신 그냥 네거티브 합시다."

종교칼럼



장현 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대통령 하나’

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다. 미수습자들을 수습하는 일과 진상규명을 위한 것은 일이다.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또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탕식 롯데 골프장으로 반입을 했다. 반입하는 과정에 군 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해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했다. 평화기도를 진행중인 종교인들과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탄압을 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 평화와 번영의 세상을 만드는 일이 시대적 과제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사회다. 또한 촛불 이전과 이후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지금 대선후보와 각 정당은 촛불심심과 무관하게 보인다. 촛불의 요구는 개혁이다.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 개혁이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책임은 옛 의원(舊) 후보들은 색깔론을 다시 꺼냈다. '북한 주적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 '친북 좌파' 낙인 찍기가 난무하고 있다.

오늘은 총무공 이순신이 태어난지 472주년이다. 이순신 리더십이다. 그는 한산

해전을 비롯한 많은 해전에서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총무공은 매일밤 허리를 풀지 않고 잠을 잤다. 겨우 서너 시간을 잔 후 일어나서 사람을 불러 일을 의논하기를 날이 샅때까지 했다. 이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이다. 새로운 세력교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 리더십이 필요하다. 총무공 리더십은 신뢰다. 물질적으로 가진것은 적었지만 '신뢰'라는 재산을 크게 쌓았다. 그가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하고 원칙에 충실한 몸가짐 때문이다.

국정농단의 결과가 무엇인가. 뇌물로 정적하지 못한 불의한 정권의 끝을 우리는 보게 됐다. 정직과 신뢰의 리더십 상실이다. 정직과 진실은 내면적 가치다. 인격의 리더십이다. 정치인들에게 인격을 찾는다 고 하는 것이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격이 없는 리더는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성경에 의한 열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은 자명하다.

인도의 '아무나'공원이란 건디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한편에 '마하트마 건디가 말한 7가지 약덕'이라는 비석

이 있다. '철학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하나는 '철학 있는 정치' '도덕 있는 경제' '노동 있는 부' '인격 있는 교육' '인간성 있는 과학' '윤리 있는 쾌락' '헌신 있는 종교'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건디 리더십이다.

'대한민국 태어나고/ 마흔 살/ 나 태어나고/ 마흔 살// 불혹의 나이에/ 나 꿈 하나 있지 않 있고 말고/ 대한민국에서 나 꿈 하나 있고 말고// 그 꿈/ 철학을 부수고/ 저 들녘 농부의 마당으로 뛰어나가/ 그 꿈/ 담배락을 넘어뜨리고/ 저 거리 노동자의 일터로 달려나가/ 대통령 하나 만드는 일이지// 부자들 정치헌금으로 아니고/ 미국산 밀가루와 화학가루로 아니고// 우리네 농부들 흙 묻은 손으로/ 찰흙으로 빚어내/ 우리네 노동자를 뜨거운 입김으로 달구어/ 그런 대통령 하나 만드는 일이지// 꼭 하나 죽기 전에 만드는 일이지/ 등은 동해바다 건너 태평양을 등지고/ 가슴은 사천만 가슴으로 숨쉬고/ 척추는/ 남에서 북으로 뻗어/ 태백산맥으로 일어서/ 그런 대통령 하나' (김남주 시인 '대통령 하나')

기고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미래전략팀장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었는가?

성 간 여행과 같이 지금 연구에 회자되는 여러 기술이 등장한다. 영화가 27년 전에 나왔고 소설이 51년 전에 세상 빛을 보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작자의 선견지명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다. 아마도 이 소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단지 허무맹랑한 소설가의 덧없는 상상력으로 치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지금, 소설에서 언급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개발 완료 단계이거나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도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그것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러한 진보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아니라 50여년 전, 아니 근대문명이 탄생한 이래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탄생을 스탠퍼드 대학교가 설립된 1891년으로 보는 미국 현지의 시각으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은 126년 전,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이 끝나가던 무렵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난해부터 정부는 물론 여러 지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

양한 논의가 있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대학교와 기업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도 머리를 짜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만, 1차 산업혁명 시대를 되돌아볼 때, 전 세계적 수준의 경제체제 변화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니, 사물인터넷이니 3D프린팅이니 하는 첨단기술에만 매몰되어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동안의 산업육성정책과 차별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면에서 등장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소수의 기계와 사람, 기계와 기계 사이에도 존재하는 이른바 '초연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인간 노동력 투입이 거의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길거리에는 스스로 운전하는 택시와 버스, 화물차가 넘쳐날 것이고, 공장에서는 스스로 공정을 선택하고 상호 통신으로 생산라인을 수시로 바뀌거나 자율적으로 생산하는 로봇이 제품을 생산해 낼 것이다. 필연적으로 인간 노동력

감소에 따라 일자리의 감소와 그로 인한 대다수 계층의 소득 감소로 소득의 초양극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1차 산업혁명 시기의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기계부수기)이 다시 재현될 것인가.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해주되, 그로 인해 발생해는 이윤과 소득의 상당 부분을 노동자에게 되돌려 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러다이트 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여가를 즐기고 인문·철학적 사고와 문화 예술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 삶을 좀 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옮겨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이른바 기 본소득과 로봇세(稅) 논의다.

4차 산업혁명은 요즘 논의되는 최첨단 기술들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그러한 기술들이 가져올 사회적 변혁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만 풍성한 열매를 모두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을 우리 지역 산업에 접목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미래상을 미리 예측해보고 사회적 대응 체계를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아직도 계속되는 군사독재 망령 ‘보안관찰’

광주에서 트라우마센터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윤주(55)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오늘 열린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인권을 옥죄는 독재시대의 유물에 맞서 악법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강 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집단 사건'에 연루돼 60일 동안 참혹한 고문을 받고 14년을 복역했다. 이 사건은 5공화국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 낸 대표적인 고문 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강 씨는 원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된 뒤 1999년 출소 이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불복중 투쟁을 벌여 왔다.

그렇다면 보안관찰법은 어떤 법인가. 이 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보안관찰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2년마다 경신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보안관찰법의 피처분자가 되면 3개월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억누르는 반인권적 악법인 것이다. 게다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일상적 감시로서 주변의 동료나 이웃들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함으로써 창상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이중 처벌이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한번 리스트에 오르면 죽을 때까지 빠져 나갈 수가 없다.

강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도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향제도를 거부한 양심수였다. 그런 그가 인권침해적인 보안관찰의 신고 의무에 불복하는 건 자연스럽다.

더군다나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014년 보안관찰법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강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관련 재판부는 부디 판결을 보류하고 보안관찰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정을 다시 해 주길 바란다.

도시철도 2호선 또다시 차질 빚지 않도록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본격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잇그제 "2호선 차량 형식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조달청을 통한 조달 구매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착공 일정, 난공사 구간을 감안할 때 차량 형식 결정 등을 더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2호선은 광주시청~백운광장~광주역~침당~시청으로 이어지는 순환선이다. 시는 공사 기간을 고려해 차량 형식·실시설계 입찰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시가 입찰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올해 편성된 예산 174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내년 예산 확보에도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차량과 신호 분야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불리 발주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란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

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시의회에서는 불리 발주는 안전성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시의회의 판단대로 안전이 문제라면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 편의와 도시 발전을 위해 계획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더 이상 지연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도 민선 6기 운장현 시장 취임 후 건설 여부 재검토에 건설 방식까지 오락가락하면서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한 뒤 차량 형식이나 입찰 방식 등을 놓고 시의회와 갈등으로 반년 이상 지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양측이 시민 안전이라는 공통분모를 놓고 고민하되, 시민과의 약속인 착공에 장기적 차질을 빚게 하는 소모적 논쟁은 피해야 한다. 시와 시의회의 시민 편의와 광주 발전이라는 공통분모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책을 읽다가 묘한 경험을 했다'라는 말을 가끔씩 주변에서 듣게 된다. 어느 날 무심코 펼친 책에서 정말 뜻밖의 위안이나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다.

의자에 편히 앉아 시선 가는 대로 문장을 따라 읽다 보면 문득 눈동자가 커지고 머리에 불이 들어오는 듯한 때가 있다고 했다. 서둘러 되돌아가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 보면 그 단어, 그 문장은 그때의 내가 절실히 찾고 있었던 것들이란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실의에 빠졌을 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

우연과 필연

니었던 글과 문장에서 위안과 용기를 발굴해 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이다. 우연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이었던 셈이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표라도 더 그러모으려는 대선 후보들의 막바지 경쟁이 뜨겁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릴 수 있을 뿐이다. 선입견·편견 없이 바라보면 우리가, 시대정신이 필요로 하는 후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연의 후보가 선택되길 기대한다.

실한 필요를 알아차린 마음이 스스로 작동하고, '절박한' 그 마음이 아무것도 아를 발견하거나, 매일 하던 운동을 빼먹어 점점할 땐 "자기에게 지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를 이기겠어요?"라는 유명 운동선수의 말이 눈에 들어오는 식이라는 설명이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의 '나'는 그런 글과 문장 그리고 거기에 서 얻을 위안과 용기에 목말라했다가 이것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공통된 '자기 심리 분석'이다. 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선입견이나 편견, 지나친 기대가 없어서였을

/홍형기 사회부장 redplane@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